

	<b>보도자료</b> <b>2009년 7월 6일 (월)</b>	작 성	미래비전비서관실
		비서관	김상협
		행정관	이창수
		연락처	(02) 770 - 7306
'09.7.6(월) 16:1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배 포	대변인실 춘추관

##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추진

### -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발표 -

#### - 7.6 녹색성장위원회 제 4차 보고회의서 -

□ 정부는 6일 녹색기술 및 산업, 기후변화 적응역량, 에너지 자립도·에너지 복지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,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.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%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원~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명~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·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. 자동차업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km/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/km 이내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(선택형 단일규제). 또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가 전국에 조성된다.

□ 녹색성장위원회(공동위원장 : 국무총리·김형국)는 7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국무총리, 녹색위 위원장, 관련

부처 장관, 국회의원, 지자체장,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,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,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」 등 4개 안건을 발표했다.

-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'저탄소 녹색성장'을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아래 10대 정책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, 녹색금융, 자동차 연비,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녹색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.
- 이번 회의에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장, 시민단체 대표, 연구기관장, 국책은행장, 관련 기업 CEO 등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여,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.
- 이로써, 구체적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계의 참여와 협조 아래 녹색성장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- 안건별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

- ◇ '20년까지 세계 7대, '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
  - '09~'13년 기간중 총 107조원 수준을 투자, 156만명~181만명의 일자리 창출
  - '09년 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, 내년부터 단계적 감축
  -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,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 및 원전 플랜트 수출('12)
  - 기후변화 예측·감시 역량 강화 및 사전 재해예방체계 구축
  - 지능형 전력망, 연료전지 등 중점 녹색기술 상용화('12, Green Tech)
  - 중소기업 녹색화 추진 및 Zero-Emission 산업단지 확대
  -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('11) 및 단계적 도입('12)
  -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,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확대 등 그린빌딩 활성화
  - 탄소라벨링 확대(50→500개) 및 탄소포인트제 시행('09)
  - 녹색ODA비중 확대(14→20%) 및 환경성과지수 등 녹색성장 국제지수 관리

□ 녹색성장위원회는 「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」을 발표하고 구체적 추진전략을 논의했다.

□ 우선, 「2020년까지 세계 7대,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」을 녹색성장 비전으로 채택하고,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.

〈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의미〉

- 국민 경제 및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바, 예산의 운용 시계(time frame)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
- 과거 압축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했던 경험을 발전적으로 되살리되, 경제개발계획의 plan 개념 보다는 실용적인 실천 방안(action plan)으로서 매년 연동(rolling)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함

□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.

- (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)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, ② 탈석유·에너지 자립 강화,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
- (신성장동력 창출)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,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,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,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
- (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) ⑧ 녹색국토·교통의 조성,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

□ 10대 정책방향별 주요 추진계획('09~'13년)은 다음과 같다.

- (효율적 온실가스 감축) 금년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건축, 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.
- (탈석유·에너지 자립 강화)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. 특히, '12년까지 미자립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, 최초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.
- (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) 기후친화형 해양관리 및 사전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, 수자원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 및 산림 생태계 건전성 제고, 기후친화형 건강관리 등도 중점 추진한다.
- (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) 녹색 R&D 투자 및 그린IT 지원을 확대하고, LED, 태양전지,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상품을 중점 육성하여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을 8.0%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
- (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 육성)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 경영체제 확산, 녹색 중소기업 확산, Zero-Emission 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, 도시광업 활성화 등 자원순환형 경제·산업구조를 구축한다.
- (산업구조의 고도화) 방통융합, IT융합, 로봇산업, 신소재·나노 등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고, 의료·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,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전환한다.
- (녹색경제 기반 조성)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11년부터 시범실시하고 12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며,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녹색 금융 활성화,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, 친환경 세계 운영 및 녹색인력 수급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.

- (녹색국토·교통의 조성) 자원순환형 지역개발을 확대, 그린빌딩·그린홈을 활성화하고, 철도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55%까지 확대한다.
- (생활의 녹색혁명) 탄소라벨링 인증품목을 500개까지 확대하고,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를 30만 가구 양성한다.
- (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) 녹색ODA비중 20%를 달성하고, 글로벌 녹색성장에 협력하는 등 **Green Hub Korea**를 구축한다.
- 녹색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 고루 미쳐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배려했다.
-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, 에너지 빈곤가구수를 '09년 123만 가구에서 '13년 89만가구로 축소하는 등 **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추진**하고,
-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상하수도를 확충하고 가뭄지역 물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.
- 숲 가꾸기, 탄소순환마을 조성, 수변녹지 조성 및 중소규모 댐 건설 등 서민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
- 취약계층 교통비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, 원격진료사업 확대 및 기후변화 구호체계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.
- 또한, 녹색성장이라는 시대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고,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녹색경영진단 매뉴얼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전략 수립을

- 지원하며 중소기업을 녹색 작업장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R&D 투자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, 대·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십을 확산시킬 계획이다.
- 녹색성장은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, 특히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이를 위해,
-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 확산을 통해 녹색소비를 촉진하고, 고효율 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소비 패턴을 확산시키기로 했다.
- 녹색시민을 양성하고 녹색가정을 육성하는 데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녹색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또한, 생활단위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및 녹색마을 운동 전개를 위한 여성들의 선도적·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.
- 이상과 같은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정부는 '09~'13년간 총 107조원 수준을 투입할 계획이다. 이는 매년 GDP의 약 2% 수준으로 UN에서 권고하는 녹색투자(GDP의 1%)의 2배 수준이다.
- 정부는 관련소요를 '09~'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.
-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해 '09~'13년간 182조원~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명~181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향후 각 부처·지자체에서는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과 일관성을

유지한 별도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, 녹색성장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수립된 추진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·관리할 계획이다.

- 오늘 발표한 「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」은 그간 녹색성장 위원회가 8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(12개반)과 협력하여 수립하였고, 계획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(6.23)를 실시함은 물론, 각 부처·지자체, NGO, 녹색성장민간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.

## 2.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

- 녹색성장 분야에 장기·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채권 및 녹색예금을 발행
- 녹색프로젝트 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
-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제(녹색인증제) 도입

-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녹색성장 분야로 시중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.
-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녹색산업의 경우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며,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도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.
-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.
  -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「녹색인증제(Green Certificate)」를 도입
  - 향후 미래 주력 수출품목이 될 수 있는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「전략적 육성방안」을 마련
  - 자전거도로,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민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 확대를 유도
  - ESCO(에너지 절약 전문기업)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용자 규모를 금년 1,350억원에서 '13년 2,000억원으로 증액

□ 또한 자본시장을 활용하면서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 유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.

○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저리의 녹색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을 발행

○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은 출자로 녹색펀드를 조성하고, 인증된 녹색기술·프로젝트에 일정부분(예:60%)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

### 3.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

- 자동차 연비를 17km/L 이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140g/km 이내로 제한  
- '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되, '15년까지 모든 판매차량이 적용
- 자동차 업계는 두 기준 중 한 개를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 도입
-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계, 자동차 구매자 대상 인센티브-디스인센티브 도입
- 자동차 세제를 현 '배기량 기준'에서 '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'으로 전환

□ 녹색성장위원회, 지식경제부, 환경부는 자동차 규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.

□ 정부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, 각국 간의 생존을 건 그린카 개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.

○ 이번에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 맞추어 17km/L이상(연비) 또는 140g/km이하(온실가스)로 각각 대폭 강화하되,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%, 2013년 60%, 2014년 80%, 2015년 100%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.(현재 연비기준은 2012년부터 배기량 1,600 cc 이하 차량은 14.5 km/L, 1,600 cc 초과 차량은 11.2 km/L)

\* 미국 측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연비가 15~18% 자동 상승하는 효과 감안

○ 정부는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일 바,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또한 미국,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배출가스,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·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.

□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기준 달성 및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, 저탄소 고효율 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, R&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 기준, 규제방법 및 절차 마련, R&D 지원 방안 수립 등 세부 추진 계획을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.

#### 4.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

- 2020년까지 전국 14개 환경에너지타운·600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
  -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·바이오·환경문화단지 등을 조성하여 세계적 명소화
  - 농촌과 소도시 중심으로 에너지자립형의 '저탄소 녹색마을' 조성
-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농림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반조성
  - 가축분뇨로 매달 270만KW(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1달치 사용량) 전기 생산
  - '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의 12%에 해당하는 목재펠릿 500만톤 공급 등

-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.
- 우선 수도권, 부산,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 '환경에너지타운'을 조성할 계획이다.
  - 특히, 하루에 1만 8천여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, 자연력, 바이오, 환경문화단지 등 4개 테마타운을 조성하여 세계적 환경명소화와 국제적 브랜드화를 제고한다.
- 아울러, 농촌과 소도시에는 '저탄소녹색마을'을 조성하여,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.
  - 내년부터 '12년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'20년까지 600개의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.

- 또한 농림수산 바이오매스는 아직 경제성은 낮지만,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해 대량생산 및 에너지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.
  - 특히,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을 '13년까지 90%로 끌어올리고,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통해 매달 270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.
- 목재펠릿의 경우, 제조와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고 2013년까지 펠릿제조시설을 41개소 설치하며 펠릿보일러도 37천대를 보급하고 품질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.

## 〈 불 입 〉

브리핑 일정 : 7.6(월) 10:15, 청와대 춘추관

※ 지식경제부·환경부·농림수산식품부 합동브리핑 :  
7.6(월) 10:15, 과천청사 합동 기자회견장

안건별 담당자 연락처

### [안건 1]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녹색성장위원회	육현수 사무관	02-735-2984	hsyook@korea.kr

### [안건 2]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기획재정부	박정현 사무관	02-2150-4552	rigel96@mosf.go.kr
금융위원회	김건영 서기관	02-2156-9781	klmk@fsc.go.kr

\* 기재부·금융위 합동브리핑 : 7.3(금) 17:30, 과천청사 합동 기자회견장

### [안건 3]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녹색성장위원회	류필무 사무관	02-735-2975	ryuplimu@korea.kr

### [안건 4]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환경부	최기영 서기관	02-2110-7727	gilhyung@me.go.kr
농림수산식품부	전익성 사무관	02-500-2438	johnis@korea.kr

안건보고서 : 별첨